文, 아베와 北과 대화조건 · 과거사 논의

네번째 정상 통화
아베 "강제징용 日 국민 우려"
文 "미래 관계 걸림돌 안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네 번째 정상 통화를 갖고 점점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한 한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미일 연대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올바른 여건'에 관한 견해도 나누었다. 아베 총리는 통화 말미에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 청구권 발언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11시10분까지 30분간 아베 총리와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두 정상은 문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5월 11일을 시작으로 북한 도발 이슈가 있었던 5월 30일과 지난 7일에도 정상 통화를 했으며 이번이 네 번째 통화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괌 포위사격' 발언 등으로 긴장 수위가 높던 지난 15일 문 대통령에게 정상 통화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의 광복절 메시지와 시기상 이유로 이날 통화가 성사됐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통화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한일간 및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확인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대화를 위한 올바른 여건에 대해 한일간 및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양 정상은 정부 노력뿐 아니라 한일의원연맹과 같은 다양한 노력들도 양국관계 발전에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며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다음달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된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현안과 과거사 문제에 어떤 대화를 나눌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통화 말미에 한일 과거사 문제 대화를 나눠 이목을 끌었다. 이날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사안을 비롯한 청구권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두 정상 통화에 배석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베 총리가 '대통령의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발언에 일본 국민들 사이에 걱정이 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답변과 궤를 같이하면서 '그러나 이 문제가 양국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면서 "아베 총리도 (이 문제를) 관리하면서 한일이 성숙한 관계로 가야한다는 취지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 방송기자에게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츠비시 등을 비롯한 회사 상대로 갖는 민사적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한국 대법원의 판례"라며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이재용, '박근혜 뇌물' 1심서 징역 5년 선고

법원, '국정농단 핵심' 유죄 판단
특검 "책임 미뤄" 징역 12년 구형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여러 재판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이 부회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3월9일 첫 재판이 열린 지 169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총 5개의 혐의를 받았다. 죄명으로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다.

이 중 핵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비상장계열사 상장 등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정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줄 서있는 방청객들 지난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보기 위한 방청객들이 줄을 서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최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이 부회장은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법정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의 일방적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도 직접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울먹이면서도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은 결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같은 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66)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안호영 "지역맞춤형 4차 산업 국가균형발전 첩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과 청년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 및 청년 일자리 창출토론회'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양대 글로벌 R&D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유동수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KISTEP 임기철 원장과 대학, 연구기관, 지역기업,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지역의 R&D전략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지역 및 청년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안 의원은 인사말에서 "각 지역의 경제상황에 맞는 ICT융합체계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지역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되고 연구개발(R&D) 투자환경이 혁신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농어촌환경에 접목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우선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 변화에 맞는 환경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봉훈 한양대 R&D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이용해 농어촌의 산업융합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글로벌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R&D 및 지역 R&D 연계·활용 강화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조재혁 KISTEP 연구위원은 4차 산업중심으로 지역산업체계를 혁신하고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민간기업 간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최세균 전 농촌경제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관, 황지호 KISTEP 사회조정본부장,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현태인 전북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박천창 무진장 좋은마을네트워크 대표 등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눴다.

토론자들은 인력과 혁신자원 수도권 집중,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R&D투자 부진 등의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며 지역특화 연구개발, 중앙 및 지방정부연계, 지역산업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법과 제도의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진성 기자

검찰 '국정원 댓글' 추가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검찰이 이명박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일명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25일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서울과 수도권 모처에 있는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2곳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모씨 등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사무실 등 3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씨 주거지 외에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이명박과 아줌마부대'의 후신 늘푸른희망연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23일 이후 관련자 압수수색과 함께 소환조사에 나서고 있다.

또 오는 30일 예정돼 있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 변론재개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며 "이게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들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재개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사이버 외곽팀 관계자 2~3명을 불러 조사도 벌이고 있다. /뉴시스